

긴급점검!

코로나19와 인종차별

토론회

2021. 4. 2. (금) 오후 3시 - 6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2 & Zoom

발제 1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문제는 사라졌는가 _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발제 2

코로나19이후 나타난 이주민 차별
_우다야 라이(이주노동조합 위원장)

토론

이진혜 (차별금지법제정이주연대)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강슬기 (엑소더스)

이종걸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김병철(법무부 이민조사과)

긴급점검! 코로나19와 인종차별 토론회

일시 | 2021년 4월 2일(금) 15:00 - 17:00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2 / ZOOM 병행

| 시 간 | 프로그램 | 내 용 |
|---------------|------|-------------------------------------------------------------------------------------------------------------------------------------------|
| 15:00 - 15:05 | 입 장 | 진행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 15:05 - 15:15 | 인사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
| 15:15 - 15:35 | 발제 1 |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문제는 사라졌는가 : 최홍조(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시민건강연구소) |
| 15:35 - 15:55 | 발제 2 |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본 코로나 방역 차별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 15:55 - 16:00 | 휴 식 | |
| 16:00 - 17:30 | 토론 | 1.이진혜 (차별금지법제정이주연대/이주민센터 친구) 2.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3.강슬기 (의정부EXODUS) 4.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前)) 5. 김병철 (법무부 이민조사과) |
| 17:30 - 17:45 | 질의응답 |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지원 | OVD△음 인권재단사람

Emergency Check! Corona 19 and Racism Discussion

Date | April 2, 2021 (Friday) 15:00 - 18:00

Location | Yeouido Irum Center Education Room 2 / ZOOM

| time | program | contents |
|---------------|----------------|----------------------------------------------------------------------------------------------------------------------------------------------------------------------------------------------------------------------------------------------------------------------------------------------------------------------------------------------------------------------------------------------------------------------------------|
| 15:00 - 15:05 | entrance | mc : Jang, Ye jeong(Co-executive chairman of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
| 15:05 - 15:15 | greetings | Lee Sang-mi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Jang Hye-young of Justice Party of Korea |
| 15:15 - 15:35 | presentation 1 | Administrative Order for COVID-19 Testing for "Migrant Workers," Has the Problem Disappeared? :Choi, Hong-jo (COVID-19 Human Rights Network/ People's Health Institute) |
| 15:35 - 15:55 | presentation 2 | Discrimination in COVID-19 Quarantine Measures from a Migrant Workers' Perspective Udaya Ray (Migrant's Trade Union (MTU) Committee Chair) |
| 16:00 - 17:15 | Discussion | 1. Lee, Jin Hye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a friend at the immigration center) 2. Ok-geum Won (Accompaniment, a center for immigrants) 3. Kang Seulgi (Uijeongbu EXODUS) 4. Lee, Jong Geol (Opposition to sexual minority discrimination Rainbowaction/ Headquarters of Queer Action Against COVID-19(Ex) 5. Kim Byung-cheol (Ministry of Justice / Immigration Policy Division) |
| 17:15 - 17:30 | Q & A | |

Cosponsor | The office of Lee Sang-min of the Democratic Party, The office of Jang Hye-young of Justice Party, JCMK, Coalition for the Equality of Migrant Workers,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Corona-19 Human Rights Response Network

Support | human rights foundation SARAM

발제 1.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문제는 사라졌는가.

최홍조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 시민건강연구소)

1. 첫 번째 오해: 방역은 다르다.

신종감염병 대유행이 일 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응 초기,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전염되는지, 전염이 되면 얼마나 아픈지, 혹시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심, 또 조심이었습니다. 이제 병을 조금 알게 되고, 백신도 보급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심, 또 조심입니다.

방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를 써라, 거리두기를 해라,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 아프면 쉬어라,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받아라 등 ‘행정명령’이라는 단어를 입히지 않았을 뿐, 많은 명령에 둘러싸인 지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방역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 생각했습니다. 만나지 마랬는데, 왜 만났느냐, 가지마라 했는데, 왜 갔느냐,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왜 벗었느냐. 와 같은 비난이 확진환자들을 향했지만, 감수해야 할 비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둔감했습니다. 대부분의 비난이 ‘개인’을 향했지만, 이 역시 방역을 위한 조치라 생각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왜 만나는지, 밖으로 나오는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못했는지를 묻고, 알아보고, 그 원인을 개선하려는 방역 조치는 없습니다. 개인 탓하는 방역은 있지만, 개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노동을 생각하고, 조금 더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바이러스와 대결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조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인권의 유보, 박탈, 훼손에 대해 모든 것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인권보장과 방역이 서로 반뎃말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졌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처럼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진 행정명령을 내리는 과정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차별이며 인권침해입니다.

방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방역에도 원칙과 책임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오래된 인권원칙 ‘시라쿠사의 원칙’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인권의 유보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침해 혹은 제한적 방법”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인권침해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권의 제한을 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해야 하며, 인권의 제한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었습니다. 문제의 출발이었던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은 노동환경과 공동기숙생활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전파에 취약한 노동환경과 생활터전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최초의 방역’이어야 했습니다.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강제적 검사가 아니라 자발적 검사 참여를 제안해야 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구분이나 취약한 노동자들의 검사 받을 권리를 보장했어야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최초의 수단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이며 강제적인 검진 행정명령을 선택했습니다. **행정명령이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두 번째 오해: 검사는 만능이다.

정부는 한국의 방역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역 정책이 전세계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나쁜 홍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홍보 과정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빠른 ‘검사’, 정확한 ‘검사’,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이주민 강제검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 이유는 아닐까 합니다. 한달이 멀다하고 등장한 ‘전수조사’라는 단어는 매우 비과학적인 방법이고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며, 차별적 인권침해와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수조사는 비과학적 방법**입니다.

100% 정확한 검사는 없습니다. 모든 코로나19 감염병을 다 확인해 줄 것만 같은 소위 PCR 검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검사법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100명의 감염인 중 95-99명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감염인 100명 중 1명을 놓칩니다. 이것이 검사의 정확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의 숫자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에 10명 꼴로 감염이 전파된 집단을 대상으로 PCR검사를 하고 여기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감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감염율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평소에 감염율이 0.01-0.02%인데, 이번 이주민 강제검진에서 0.15%로 매우 높게 나왔다고 고무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주민 10,000명 중에 15명이 감염인이라고 합시다. 이 10,000명의 이주민이 PCR검사를 받으면 감염된 15명 외에 또 다른 10명이 검사 양성이라고 나옵니다. 거짓양성입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의 내외국인 차별없이 검사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험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확한 검사가 위험이 매우 낮은 집단에서는 너무 많은 수의 거짓양성 환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위험도 혹은 감염가능성에 따라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과학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전수조사는 차별적 인권침해를 조장**합니다.

작년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이후 이동통신 3사는 해당기간동안 해당지역에서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의 통신기록을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장 브리핑에서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행히도,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초기 적극적 문제제기로 인해서 강제적 전수조사의 계획은 자발적 검사권 보장과 익명검사 보장의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수조사 만능이라는 인식과 소위 K

방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자심감이 자칫 차별적 인권침해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전수조사의 위험성은 다른 관점으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방법에는 ‘감염병의심자’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장이 소위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의심자’는 과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정확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단어인 ‘접촉자’이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전수조사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위험의 정도에 따른 검진이 아니라, 이주민 ‘만’을 행정명령으로 삼은 차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럼 방역을 위해 어떻게 하라는 말이나는 질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지침에 따라 검사하면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을 9-5판까지 개정 발행했습니다. 이 지침은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방역활동의 구체적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세 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소견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이 있고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검사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한 이주민 전수검사의 근거는 이 지침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이 과학적 지침을 넘어서고 있고, 비록 법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과학적 지침에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3.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했어야 할 책임은 방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차별적 조치 시행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작년 6월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작년 19월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이하 시민백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낙인과 혐오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고,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지 않도록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나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보여주었고, 이주민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과정과 긴급생활지원금 정책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주민을 배제했습니다. 시민백서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대응 초기 철저히 이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한 결과 이주민 감염사례가 적었던 역설적 상황을 우려하며, ‘누구 한 명만 걸리면 우리는 다’라는 이주민의 공포와 불안을 문제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단호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약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방기의 결과가 최근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라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히려 행정명령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강제검사“만” 합니다. 감염병도 인생사와 같은 자연경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병원체 노출 이후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전염시킬 수 있는 감염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임상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2일 전까지 접촉한 사람들을 검사대상으로 포함하는 이유가 감염병의 자연경과 때문입니다.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PCR 검사에서 거짓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염력이 발생하기 이전 감염초기에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은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방역당국은 ‘방역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발표를 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이주민은 법적 지위에 무관하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동시에 결핵검진과 연계하여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검진을 계획합니다. 8월에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홈리스 검진 참여자 중 코로나19 감염인은 없었습니다. 홈리스인권 단체는 홈리스를 위한 방역대책은 주거라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주장을 이후 지속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만’ 하고 방역조치를 끝낸 정부와 지자체는 1월 노숙인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4.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자발적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지자체는 외국인만을 차별적으로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행정명령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도 서울시 권고 조치 이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방역은 검사 ‘만’ 하고 확진환자를 찾아내는 것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주민이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방역정책입니다.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거가 취약한 사람이, 더 많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병입니다. 국무총리가 ‘감수성을 갖춘 섬세한’ 방역을 이야기하지만, 이주노동자가 권리의 주체임을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역정책은 검사 ‘만’ 남발하는 정책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2분기 백신접종이 한창입니다. 65세 이상의 이주민들의 백신접근권이 걱정입니다. 3분기에는 모든 이주민에게 공평한 백신접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보듯이 지자체는 얼마나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이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모르는 정부가 이주민에게도 공평한 백신접종을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접종계획을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협력하는 길입니다.

Presentation 1. Administrative Order for COVID-19 Testing for “Migrant Workers,” Has the Problem Disappeared?

Choi, Hong-jo (COVID-19 Human Rights Network/ People’s Health Institute)

Misconception #1: Quarantine is different.

The COVID-19 pandemic has now been ongoing for over a year. At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response, information as to how contagious, painful, or deadly the virus was limited. The only thing we could do was to be cautious, extra cautious. Now we know a bit about the virus, and its vaccine is being distributed. However, our actions haven’t varied too far. We have to be cautious, very cautious.

It was the same for quarantine. Wear a mask, distance yourselves, stay home, do not leave your house, rest if you are sick, and get tested if you suspect any symptoms. We have spent the last year surrounded by many orders, orders that were not labeled as “administrative orders.” I thought everything was inevitable for quarantine. Questions directed at Covid-19 confirmed patients, such as why did you have gather together when told not to, why did you have to go when told not to, and why did you take off your mask when told not to, were criticisms that I thought they should rightly bear. I was insensitive. Most of the accusations were directed at “individuals,” but I reasoned this was for quarantine. Even now, a year later, this flow of events has not changed. There are no measures to get to the root of the problem as to why individuals go out to meet, why they did not wear their masks properly. We have quarantine measures to point fingers at an individual, but we have yet to begun to look after the lives and livelihood to create a safer society from COVID-19.

The nation is in a battle with the virus, and many of the measures taken in this process were considered inevitable. In particular, reservations, deprivations and damages to human rights have been justified in the name of quarantine. Problems concerning unilateral measures taken by the central government were frequently proposed, and it was known that safeguards of human rights and quarantine were not on opposite poles, but not much has changed. This administrative order for COVID-19 testing among foreign workers across the country also a discriminatory act and violates human rights in the name of quarantine.

Quarantine is no different. There are principles and responsibilities that follow quarantine.

The old human rights principle for public health, “Syracusa Principles,” emphasize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the reservation of human rights is “necessary to achieve the target” and “minimal infringement or restrictive methods to achieve the target” is allowed. Human rights violations must be “not arbitrary or discriminatory, but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n addition, if there is an “an alternative that can achieve the same effect without restricting human rights,” it should be prioritized, and the restri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the “last resort.”

The recent administrative order was not “the last resort,” but “the first resort.” The working environment and dormitory was the starting point that started cluster infection of migrant workers. The “prior quarantine measure” should have been to find measures for better working environments and living standards. Voluntary participation for COVID-19 testing could have been offered instead of forced testing that would be punishable by law. There should have been a guaranteed right to testing for vulnerable workers, not separated by nationalities.

The public health authorities chose to mandate a discriminatory administrative order for migrants as the first measure to force testing, even though there were other options. This is why an administrative order is not an inevitable option for quarantine.

Misconception #2: Testing is key.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Korea's quarantine method to the world. If a good quarantine policy can be used for people around the world, it is not bad publicity. However, the word “testing” always appears in promotion. The confidence in quick “testing,” accurate “testing,” and numerous “testing” seems to be the basis that compulsory migrant checkups could solve all the problems. The phrase “total enumeration,” that appeared in a month’s time is a very unscientific method, and is a classic security theater for this administration, and is very deeply linked to discrimination of human rights.

First, total enumeration is an unscientific method.

There is no test that is 100% accurate. The same is true for the so-called PCR method, which is thought to confirm all COVID-19 cases. Although methods differ slightly, it can diagnose 95-99 out of 100 infected people. But, it misses 1 in 100 people who are not infected. This is the accuracy of the test. However, the number varies on site depending on who is being tested.

For example, a group of 100 people that have been infected by 10 persons can take

the PCR tests, and those whose results are positive are probably actually infected. However, the domestic infection rate is not that high right now. One local government reported that the infection rate is on average of 0.01–0.02%, but the infection rate among migrants who were forced to undergo testing was at 0.15%, steeply high. Let's use this number as it is and say 15 out of 10,000 migrants are infected.

If these 10,000 migrants are given PCR testing, 10 other people in addition to the 15 infected will result positive. This is a false positive. This is the reason why a guarantee right to undergo testing without discrimination among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in high-risk workplaces with a high possibility of infection is necessary. Accurate testing in high-risk groups may result in many false positives in low-risk groups. Conducting diagnostic tests based on risk or possibility of infection is more scientific instead of conducting total enumeration.

Next, total enumeration encourages selective human rights violation.

Since the Itaewon cluster infection in May last year, three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submitted communication records of the people who stayed in the area for more than 30 minutes to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e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In the Seoul Mayor's briefing, the phrase total enumeration is addressed to those persons on this list. Fortunately, due to the proactive initiatives taken by Queer Action Against COVID-19, the plan for a mandatory total enumeration changed to guarantee voluntary and anonymous inspections. Total enumeration, perceived as a key solution, along with K-quarantine measur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ok pride in could have led to a selective human rights violation.

The risks of total enumeration must be 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there is a term labeled Person Under Investigation (PUI).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mandate” medical checkups for the PUI. But the PUI cannot be grouped nor be accurately defined scientifically or legally. It includes all of the words we hear often, “cotacted person” or “presumptive contacted person.” The administrative order for total enumeration did not have a legal basis for PUI (person under investigation) to screen according to risk levels, but the administrative order was “only” migrants specific that made discrimination possible.

Then, what quarantine guidelines can we take? It is simple. You get tested according to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guidelines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has revised and issued up to 9-5 edition of Guidelines for Response to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Use for Local Governments).

These guidelines contain specific quarantine directions to be followed on the field. The “presumptive symptomatic patients under investigation” can follow specific stipulated instructions for testing that are divided into 3 sections: If you have symptoms and suspect that you are infected with COVID-19 based on clinical opinions, if you have visited overseas within 14 days and have clinical symptoms, and if there is an epidemiological connection with a domestic community spread. The basis for an administrative order for a total inspection of migrants cannot be found in these guidelines. The law goes beyond scientific guidelines, and although administrative measures are based on the law; in reality, there is no basis under scientific guidelines.

3.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 public health crisis

Firs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bandoned responsibility and took no hesitation to implement discriminatory measures.

In June of last year, the COVID-19 Human Rights Response Network released “COVID-19 and Human Rights - Social Guidelines for Human Dignity and Equa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Social Guidelines) and presented a “Social Proposal for the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and Minorities.” In addition, People’s Health Institute, Health Rights Network, and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released “Citizen’s White Paper: Human Rights-Centered COVID-19”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izen’s White Paper”) last October and pointed out the difficulties migrants faced during the pandemic.

The social guidelines appealed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nd out messages against stigma and hatred, to mitigate excessive anxiety and fear. On the contrary, through a number of administrative order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showed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migrants by creating excessive anxiety and fear among them.

Migrants have been continuously excluded from public mask purchases and emergency relief fund policies. The Citizens' White Paper pointed out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that may put them at risk to COVID-19. In particular, concerns about the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migrants had fewer cases of infection as a result of strict restriction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response and raised the problem of their fear of “if any one person is infected, then all of us (them) will be.”

But, the government has not done anything since th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id not show a firm commitment to abate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migrants. No effort has been taken to improve the vulnerabl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The government has not admitted that the recent cluster infection of migrant workers is a result of abrogating their responsibilit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inforced discrimination and hatred with administrative orders instead.

Seco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id not enforce preventive measures, but “only” mandatory testing. Infectious diseases share a natural progress as that of a life history. Infectious respiratory diseases such as COVID-19 usually develop after being exposed to the pathogen. An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infectivity develops. Soon, clinical symptoms appear.

The reason that people who have contacted two days before the onset of symptoms are included as test subjects is because of the natural course of such an infectious disease. PCR tests can result in false negatives before clinical symptoms appear. Even in the early stages of infection before the onset of infection, test results may be negative.

It can also be seen from this point that testing is not the absolute solution. In May of last year, quarantine authorities announced that they would eliminate “quarantine blind spots.”

It was announced that the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will be suspended and that they will be tested free of charge, regardless of their legal status. Concurrent with the announcement, a COVID-19 screening for the homeless in connection with tuberculosis screening was also announced.

According to the briefing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August, none of the homeless screening participants were infected with COVID-19. A homeless rights group continued to argue that quarantine measures for the homeless meant residence, bu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id not respo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nded quarantine measures by just “testing,” and thus, were unable to prevent a cluster infection at a homeless facility in January.

4. Ensure Migrants' Right to Health

Some local government have changed their administrative orders down to moderate levels. Some local governments, regardless of domestic or foreign nationals, have

recommended voluntary testing according to their risk levels.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still discriminate against foreigners as subjects for testing and have not withdrawn their administrative order. The central government has also made little effort after the Seoul City's recommended actions.

Policies on quarantine do not just include "testing" to find COVID-19 patients. Policies on quarantine laid out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ensure that migrants have the right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communities to stay healthy. There are also various social determinants for COVID-19 infections and its related deaths.

People with low income, who work in high risk environments, and with poor housing are more likely to be infected and die. The Prime Minister talks about "responsive, detailed quarantine," but it appears that he still does not know that migrant workers are at the center of these rights. Quarantine policy that guarantee health rights to migrants should be more than just a policy for "testing."

The second round of vaccination is in full swing. I am worried about the vaccination accessibility for migrants over the age of 65. In the third round, we are predicting a fair vaccination for all migrants.

As you have seen in this administrative order,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seem to know exactly how many migrants there are. I am very concerned about how the government that does not know where and how many migrants live will provide a proper vaccina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listen directly to the migrants' voices and discuss the vaccination plan together before it is too late. This is one way to recognize the migrants as members of our society and to ensure their right to health.

발제 2.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본 코로나 방역 차별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1. 재난은 평등했으나 대책은 차별적이었다.

1) 혐오의 확산, 사업장 방역 미비

코로나 사태의 발발로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은 기존에 겪어 왔던 제도적 구조적 일상적 인종차별이 더욱 노골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라는 이유로 중국동포를 비롯한 중국출신자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 반대 정서가 퍼졌고 거주 지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잠재적 전파자 취급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상점, 식당 등에 ‘외국인(중국인) 출입금지’ 안내가 붙기도 했고 일부 단체들은 중국인입국금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출신자에 대한 혐오를 넘어 이주민 전반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서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전파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업장 바깥으로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몇 개월씩 밖으로 못 나오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힘든 노동으로 인해 병이 생긴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니 사업주가 코로나 걸린 것으로 몰아가서 창고에 가두고는 근무서약을 쓰지 않으면 못나오게 했던 사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 지시와 다르게 사업장 밖으로 나가면, 다시 오지 말라고 하거나 코로나 진단검사하고 오라고 위협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에 친구 만나거나 외출할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차별 대우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중요한일 있어도 나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어느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11명에 대해서 밖에 못나가게 하는 사례도 들어왔습니다.

기숙사는 아주 열악하고 환기도 제대로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한 방에 3-4명 이상 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거리두기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주들은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만 못나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될 수 있는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열악한 숙소에서 살았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부나 사업주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2) 공적 마스크 배제

3월부터 판매된 공적 마스크에서 이주민 절반이 배제되었습니다. 중복 구매를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약국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통해서 구매자 확인을 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들은 공적 마스크를 아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초기 코로나 대응에 있어

치명적인 배제조치였습니다. 당시 이주민 25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제외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주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터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로 다르게 구매하러 가는 것에 대한 정보도 잘 알 수가 없어 구매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면마스크를 빨아 쓰거나 일터에서 쓰는 작업용 마스크를 계속 쓰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아무 방역도구들이 없어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7월에 공적 마스크 판매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내국인 노동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이주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3) 코로나 정보접근 소외, 통번역 미비

코로나 관련된 정보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이 제때에 적절하게 통번역되어 이주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들이 횡행하면서 이주민들은 자국민 소셜미디어 등에서 걸러지지 않은 정보를 접하면서 오히려 공포가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법무부 1345 콜센터,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데 이는 전화를 걸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확진자 발생 현황, 근처 보건소 위치, 증상 발현 시 행동요령,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관련 정보, 검사 및 치료비용 정보, 일터와 삶터에서 방역수칙, 지역별로 방역단계별 조치사항 등 핵심정보를 이주민들에게 친화적인 매체, 언어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통번역 시스템을 지자체별로 제대로 갖추는 것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방역대책에 이주민이 참여하고 검사, 치료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4) 재난지원금,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

가장 대표적인 재난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대다수 이주민이 배제되었습니다. 경제적 방역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혹은 난민인정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이주민을 포함시키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고를 받아들인 서울시는 등록된 이주민에게 지급하였지만 취업가능한 비자를 가진 이들만 대상으로 했고, 경기도는 올해 들어서야 이주민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살며 세금 내고 각종 의무 이행하며 재난의 고통을 똑같이 겪는데 왜 우리를 차별 대우 하느냐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실업급여 등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취업비자인 E-9(고용허가제, 동남아/서남아 16개국), H-2(방문취업제, 중국 및 구소련 동포 대상) 노동자들은 임의가입이어서 사업주들이 가입해주지 않아 가입율이 5%도 안됩니다.

더욱이 기존에 이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지역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대응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5)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미흡한 대책

39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초기부터 방역대책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미등록이다보니 건강보험도 없고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신분상의 이유로 잘 다니지 않고 병원 이용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작년 중반부터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하고,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으며 불이익이 없으니 검사를 받으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최초로 ‘미등록 체류자’라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불법체류가 아니라 미등록체류로 용어부터 바뀌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독려할 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홍보했지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볼까 두려움이 있기에 미등록 이주민들은 검사에 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홍보가 잘 전달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서 방역체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감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2. 차별의 확대,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1) ‘외국인 노동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조치

여러 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주민 절반이 일하며 살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대되었습니다. 당국은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라고 했지만 이주민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외국인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인종적 차별”이라고 거센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방역 상의 과학적 근거도 없이 외국인 확진자가 일부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이주민을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감염 의심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애초 8만 5천 명의 등록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미등록 노동자도 일부 검사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30만 명을 훌쩍 넘는 이주민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성과적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들도 대거 검사를 받아서 예상의 몇 배가 되는 인원이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과정상에서도, 선별진료소 확대와 인원이 몰릴 때의 대책 없이 실시되면서 하루 검사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이 몰려, ‘검사 받으러 왔다가 코로나 걸릴 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가번에 물리는 다른 이유는 사장들이 검사 시간이 따로 주지 않고 일요일밖에 갈수 없어서입니다. 이 강제 행정명령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너무나 위축되었고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 일하는 한국인 동료는 검사 안했는데, 만약 이 동료한테서 이주노동자가 코로나 감염되었으면 그 책임도 이주노동자가 져야 되는 걸까요?

2) 차별 시정 권고에도 일부 지자체 지속

국가인권위에서 차별로 결정하고 시정 권고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정명령을 철회하려고 했지만 서울과 인천만 명령 대신 권고로 전환했고 다른 지자체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고위험 밀집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검사 권고한다는 식으로, 외국인노동자만을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전히 차별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외국인노동자 채용 전 의무검사’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누구한테나 감염될 수 있는 것인데, 이주노동자들이 만약에 코로나 감염되면 무슨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차별적인 행정, 사회의 시선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 3밀 개선은 의문

방역 전문가, 이주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주노동자 확진자 증가의 근본원인은 거리두기가 어려운 열악한 작업환경, 여러 명이 생활하는 숙소 환경, 미흡한 사업장 내 방역조치 등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플라스틱 공장도 여러 동의 시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환기, 거리두기 등이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방역대책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일터의 상황 개선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행정명령으로 발동된 적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장 방역조치 개선에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작년에 거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일터에서 먹고 자고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 격리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사업주들이 더더욱 밖에 잘 못나가게 해서 더 감염될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다보니까 공장 안으로도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숙소환경 탓에 한번 전파되면 다수가 확진되는 상황이 일부 사업장에서 벌어진 바, 이런 취약한 방역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지 외국인노동자 집단 전체를 의심자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3. 차별 없는 인권존중 방역대책 관련 의견

1) 정보 제공, 교육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 정부, 지자체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이주민 모국어로 번역해서 일상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 등에 기존의 통번역 기능이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이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혐오와 차별을 중단시키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 표현을 규제해야 합니다. 방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슬한 이주민 차별 표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그 전에라도 정부부터 혐오, 차별 표현을 하지 않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용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3) 사업장 방역대책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방역대책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하되, 이주노동자 외출금지 같은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열악한 기숙사 환경을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 4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단속이나 통보가 없어도 불안감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코로나 관련한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민이 방역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 체류자격 상의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 합니다.

5) 차별 없는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 해결을 위해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백신접종에서 소외되지 않게 포괄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Presentation 2. Discrimination in COVID-19 Quarantine Measures from a Migrant Workers' Perspective

Udaya Ray (Migrant's Trade Union (MTU) Committee Chair)

1. Disaster was equal, but countermeasures were discriminating.

1) Spread of hatred, inadequate quarantine at workplaces

With the coronavirus outbreak, migrant workers and migrants faced a situation in which the institutional, structural, and daily racism they had experienced in the past became more explicit.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widespread hatred and opposition toward Chinese citizens and other Chinese originators spread because of the virus from Wuhan, China, and there were reports that negatively portrayed their area of residence, treating them as potential spreaders. Signs that read "Foreigners (Chinese) prohibited" were posted on windows of shops and restaurants, and some groups held demonstrations to ban the Chinese from entering the country. This hatred spread not only towards Chinese natives, but towards migrants as a whole. And this time, it was revealed again with an administrative order.

There were many cases where migrant workers were treated as potential spreaders at their workplaces.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who were not allowed to go outside from their workplace for several months or not at all. There was a case last year when a worker who had been ill due to arduous labor requested a change of workplace, but the employer locked the worker in a warehouse driving the worker to being infected with COVID-19 and to forcefully write a work pledge.

When migrants left their workplace after being instructed not to by their business owners, they were either threatened to return after COVID-19 testing or to not come back at all. Migrant workers lost their freedom to meet their friends or go out during this time. And because of these instructions, I felt that migrant workers were discriminated severely. They could not go out even if there was something important. They had to give up everything. Recently, a case has been reported where 11 migrant workers working in Busan were not allowed to leave company grounds.

There are many dormitories that are poorly built with bad ventilation. Some places allow more than 3-4 people to live in a room. This does not allow for physical distancing at the workplace. Business owners did not think about improving these facilities, but only isolating them. Migrant workers were isolated from society. These

migrant workers worked at a labor site that could be infected with COVID-19 and lived in poor accommodations, but neither the government nor the business owners thought about improving these conditions.

2) Exclusion from public masks

Half of the migrants were excluded from public masks sold in March. From preventing duplicate purchases, the government checked the purchaser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t pharmacies. As a result, migrants who did not have health insurance could not buy public masks at all. This was a fatal exclusion from the initial Corona response. At the time, of the 2.5 million migrants, half were excluded. Moreover, even if migrant workers had health insurance, they had to work long hours. And because they were not well informed about purchasing masks on different days of the week according to the year of your birth, purchasing masks was difficult.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washing cloth masks or recycling masks once used in the workplace. Migrant workers lived anxiously day to day without any protection. This continued until public masks sales ended in July. In some cases, less masks or none were rationed to migrant workers, but were provided to Korean workers.

3) Exclusion from access of information for COVID-19, inadequat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COVID-19-related information is pouring out every day, and migrants do not receive critical information because it has not been properly interpreted and translated in a timely manner. In addition, as fake news spread, migrants are exposed to unfiltered information on their own social media, which in turn increased fear.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counseling by calling the 1577-1366 Danuri Call Center, 1345 Call Center fo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1339 Call Center for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Migrants were not provided key information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confirmed cases, location of nearby public health centers, what steps to take when symptoms appear, information on screening clinics and treatment centers, information on testing and treatment costs, quarantine measures at work and living spaces, and different levels of quarantine measures by region in a more approachable medium and language.

It is very important to properly equip each local governments with 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ystem for a pandemic. In order for migrants to take proper

quarantine measures and receive testing and treatments, it is imperative to have these basic necessities.

4) Excluded from disaster relief fund and disaster relief policy

Most migrants were excluded from the disaster relief fund, the most symbolic of the disaster relief policy. The relief policy, which can be called an economic quarantine policy,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s available to immigrants only by marriage and permanent residents (or those recognized as refugees).

Although migrant human rights groups have petition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include migrants, most local governments have not budge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accepted the recommendation, provided the funds to registered migrants with working visas, and Gyeonggi Province announced just this year that migrants will receive relief funds.

There are voices that ask why migrants facing the same crisis are treated differently when they have been paying taxes and fulfilling other various obligations while living in in Korea for long periods of time. They were also excluded from employment assistance fund, emergency employment safety subsidies, and unemployment benefits, which are conditional under the employment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is not mandatory for those with employment visas, E-9 (Employment Permit System, Southeast Asia/16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H-2 (visiting employment system, for Chinese and former Soviet compatriots), so employers do not insure them, thus not even 5% have been registered for employment insurance.

Moreover, as local public hospitals, that were used mainly by migrants, were designated as COVID-19 response hospital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migrants to have access to hospitals.

5) Inadequate measures for undocumented migrants

The 390,000 undocumented migrants were left out from quarantine measures from the beginning. Since they were not registered or had insurance, and they received no support. Due to their insecure status, they did not go out or even go to the hospital.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free COVID-19 testing since mid last year because immigration will not be notified and so migrants will not be penalized.

Even the prime minister came forward and used the term “unregistered residents”

for the first time. The term should be changed to undocumented, not illegal, but it has not been officially changed. Each local governments promoted that there would be no penalty when encouraging migrants to get tested for COVID-19, but because they feared of future penalization, migrants did not respond well. The information probably did not reach them. It is best to grant a status of residence to include migrants in the quarantine system, but there are no bold measures yet.

2. Increasing discrimination, administrative order for COVID-19 total inspection

1) Discrimination measures targeting only “foreign workers”

Administrative orders targeting only “foreign workers” have been issued in several regions. As Gyeonggi-do Province and Seoul, where half of the migrants live and work, issued such orders, the situation spread by a storm. The authorities said it was taking “precautionary measures for safety,” but migrants and civil society raised a strong statement that “measures targeting only foreign workers is racial discrimination.”

Without scientific data on quarantine, all migrants were treated as “potential spreaders” and “infected suspects” because there were many confirmed cases of foreigners in some areas. Gyeonggi-do Province planned to test 85,000 registered foreign workers, and some unregistered workers were expected to be tested, but over 300,000 migrants were tested for COVID-19.

Gyeonggi-do Province praised themselves for a successful turnout, but it was fear of having to pay a fine of 2 million won that brought such results. It was for this reason that many foreigners who were not considered migrant workers were also tested, and so testing several times over the number of people expected.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there was no contingency plan for overcrowded clinics that exceeded the capacity for daily testing even with the increased number of screening clinics, and so was criticized for “catching COVID-19 while coming to get tested.” This was because these migrant workers were able to get tested only on Sundays because their bosses did not allow them to be tested on any other day.

Because of this mandatory administrative order, migrant workers were so daunted of having to put all responsibility on themselves. If Korean workers working at the same factory were not tested and a migrant worker were to be infected with COVID-19 by the Korean colleague, who is to be blamed? The migrant worker?

2) Some local governments disregarded recommended correction for discrimina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gnized administrative orders for mandatory testing among migrant workers as discriminatory and recommended that administrative orders be lif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nly Seoul and Incheon switched the mandate to recommendation but other local governments did not. Seoul is recommending COVID-19 testing only to “foreign workers working in highly crowded workplaces,” advising testing only foreign migrants. This, too, is discrimination.

Some local governments have maintained a mandate for “compulsory inspection before hiring foreign workers.” Viruses can infect anyone, but migrant workers live in fear over the disadvantages they would face if they were infected with COVID-19. The psychological suffering of migrant workers is beyond words because of such discriminating administrative mandate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scrutiny.

3) Questionable Improvements of the 3 C's (Crowded, Concealed, Close Contact)

Quarantine experts, migra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have also said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infected migrant workers ar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crowded living quarters that make it difficult for physical distancing and insufficient quarantine measures in workplaces. In the Jingwan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there were many confirmed cases found at a plastic plant where ventilation and physical distancing were almost impossible in a place with several facilities that were connected together. Quarantine measures should have focused to improve conditions like these in the workplace, but an administrative order to do so was never execute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make the effort to improve quarantine measures at the workplace, even now.

In fact, there were hardly any confirmed cases of migrant workers last year. Because they usually eat, sleep, and work at their workplace, they were in fact in a state of social isolation. During the pandemic, business owners were more strict with the workers leaving company grounds, so there was less chance of being infected. But because there was a community spread of COVID-19, it spread into factories as well. It was due to poor working and housing environments that this large number of people were confirmed with COVID-19; therefore, improving vulnerable quarantine conditions should be of priority instead of stigmatizing the entire foreign worker groups as COVID-19 suspected cases.

3. Opinion relating to quarantine measures without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1)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nd educa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routinely provide translation of important information on COVID-19 prevention into native languages of migrants. This can be done because there are existing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vailable at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unseling center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migrant support center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 Proper quarantine education on COVID-19 should be provided to migrant workers to prevent them from receiving fake news or distorted information.

2) The government must take action to end hate and discrimination.

- Expressions of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and migrants must be regulated. Discriminating remarks against migrants both online and offline must be eliminated for migrants to equally participate in quarantine.

-An antidiscrimination law is needed, and even before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the social perception by removing hate or discriminatory expressions. The term “illegal stay” must be changed.

3) Quarantine in the workplace should be supported, managed and supervised without discrimination.

- Most migrant workers work in workplaces with less than 30 employees. These types of workplaces often lack quarantine measure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upport, manage and supervise quarantine measures for small and medium-sized workplaces, and guide them so that there are no discriminatory actions, like confinement, taken against them.

In particular, the business owners should improve poor dormitory environments.

4) Drastic measures can be taken such as granting residence status to undocumented migrants.

-400,000 undocumented migrants may not come out because of uncertainty even without crackdowns or notification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COVID-19 related information is not easily accessible. Therefore, in order for undocumented migrants to properly participate in quarantine, necessary measures to alleviate any anxiety about their status should be taken.

5) Vaccination without discrimination is needed.

-While vaccination is in progress to resolve the pandemic,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vaccination standards for migrants will be the same as the locals, but there are some details to be cleared. Comprehensive and meticulous measures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migrants are not left out of the vaccination process.

토론 1.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대상 행정명령 이후 이주민차별

이진혜 (차별금지법제정이주연대/이주민센터 친구)

1. 이주노동자,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의 이주민 차별

○같은 공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여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시 행정명령의 내용: 서울시 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를 고용한 사업주는 기한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받으라‘

- 장기간 해외로 출입국한 적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도 국적을 이유로 의무 검사 대상이 되는 반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노동자는 의무 검사 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 법령]

-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1.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추구할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a)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인종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또한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지고

-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

외국인 혐오 대응

현재의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주민 및 이주와 관련된 소수민족은 그들에게 낙인을 찍고 희생양을 만드는 태도 및 행동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 정부 당국은 낙인 찍기 및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 선동, 증오 및 폭력의 발생을 방지하고,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공개 담론 및 대응이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국가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이웃과 가족 간에, 국내 및 국경을 넘어, 그리고 이주 경로와 통로를 따라 연대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이다.

○ 이주노동자의 생활상 특성’ 이 행정명령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국 출신끼리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거나 사업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과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 용산구에서 발생한 85명 규모의 집단감염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기사 중

- 특정 지역 내 감염 확산이나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숙사’ 에 집단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한일 것. 교회 등 종교활동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여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는 지자체장 등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해 감염 여부 검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상 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음(제2조 15의2호)

- 이번 지자체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그 자체로 이주민에 대하여서 차별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화하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낙인찍기, 인종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동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의해서 확립된 국가의 보증 책임을 위반함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1. 3. 22.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

- 대학교, 대사관 등 문제제기 이어지자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철회, 다른 지자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슈화도, 지자체의 움직임도 없었음.

2. 코로나19 이후 이주민 차별

- 인권위가 2020년 6월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코로나19에 대해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이주민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됨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한국 사회의 태도가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났음. 정부의 정책 결정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지만 한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이 결국 한국 내 공존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정부가 계속하여 이주민 차별 정책을 펼치는 것은 그간 이주민에 대해서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해온 태도에서 기인한 것임.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대상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시 명확히 하여야 함
-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평등권 기타 인종차별철폐협약상의 국가의 비차별 의무를 구체화하여 공적 주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화 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차별적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명쾌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렵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함. 정부가 차별적 행정행위를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함.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임.

Discussion 1. Discrimination of migrants after Corona 19, after an administrative order for foreigners

Lee, Jin Hye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a friend at the immigration center)

1.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under an Administrative Order requiring diagnostic examinations of Corona 19 for migrant workers and foreigners;

○Whether it i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to make it mandatory to conduct diagnostic tests by discriminating between people with Korean nationality and others among people who do the same space and the same thing.

- Conte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ministrative Order: Business owners who employ at least one foreign worker (including unregistered foreigners) at their workplaces in Seoul shall take measures to undergo a diagnostic examination within the deadline, and foreign workers shall be inspected without delay.

- Foreign workers who have never been abroad for a long time are subject to mandatory inspections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while Korean workers working together at workplaces employing foreigners are not subject to mandatory inspections.

[Related Statute]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1)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Article 37 (2)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CERD(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rticle 4

States Parties condemn all propaganda and all organizations which are based on ideas or theories of superiority of one race or group of persons of one colour or ethnic origin, or which attempt to justify or promote racial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any form, and undertake to adopt immediate and positive

measures designed to eradicate all incitement to, or acts of, such discrimination and, to this end, with due regard to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s expressly set forth in article 5 of this Convention, inter alia: (c) Shall not permit public authorities or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or local, to promote or incite racial discrimination.

Article 2.

1. States Parties condemn racial discrimination and undertake to pursue by all appropriate means and without delay a policy of eliminating racial discrimination in all its forms and promoting understanding among all races, and, to this end: (a)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engage in no act or practice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groups of persons or institutions and to ensure that all public author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and local, shall act in conformity with this obligation.

OHCHR Guidance on the Human Rights Dimensions of COVID-19: Migrants

The current public health crisis caused by COVID-19 disproportionately affects people and communities who are already in vulnerable and marginalised situations.

√States should take specific measures that are responsive to age, gender, disability and other factors, in order to support migrants in vulnerable situations, who are at risk of being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crisis.

√States should remain aware that if the effort to contain the virus is to succeed, it is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s in solidarity, between neighbours and families, within countries and across borders, and along migration routes and corridors. COVID-19 does not discriminate, neither should we.

○ In response to the claim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 workers' justify an administrative order, "It was an inevitable measure for quarantine as foreign workers often engage in community activities among their native countries or live in dormitories at workplaces, and mass infections occur in the process," a Seoul city official said. In fa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plained that a mass infection of 85 people in Yongsan-gu in February also occurred in the foreign community. -From an article.

- If you want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s or mass infections in a specific region, it would be reasonable restrictions to target people living in "dormitories" or to ask them to refrain from community activities. This is the same reason not to make diagnostic tests mandatory for everyone with a religion because of the occurrence of mass infections in religious activities such as churches.

-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2 2-3 Local government chiefs and others are allowed to check for infections, and "suspected infections" are limited to those who are in contact with or suspected of contact with infectious disease patients, those who are feared to be infected, or those who are exposed to infectious disease.(Article 2, 15-2)

- This administrative order for the local government diagnosis inspection is not only a disposal that enforces the obligation of migrants discriminatorily, but also a violation of the guaranteed obligation of the state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Racism by the actions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likely to promote racism.

-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lso decided on March 22, 2021 that the possibility of Corona 19 infection did not differ in nationality, but that the administrative order without reasonable reason should be stopped immediately because it is a discriminatory measure against foreigners.

- When the issue was raised at universities and embassies, the city of Seoul first withdrew these administrative orders. Therefore, there was no issue in raising the issue of other local migrant workers, and there was no response in the local governments.

2.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after Corona 19

- As a result of the NHRCK's monitoring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immigrants with Corona 19, in June 2020, it is found that they are excluded from policies such as public masks and disaster subsidies because they are immigrants, or that they do not receive information in a language that migrants can understand about Corona 19, or experience discrimination and disgust in everyday life as their hostile attitudes toward migrants are explicitly revealed.

- In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rona 19, it was clear what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and attitude toward immigrants are. It is also an opportunity to know that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of immigrants in the Korean territory, which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in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eventually contributes to the safety and welfare of all those who coexist in Korea

-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continues to pursue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is due to the attitude of completely ignoring migrant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fact that discrimination should not be handled without reasonable grounds for the subjects to be treated equally when establishing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 The fact that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stipulating that the public subject guarantees it by specifying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of the state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such as the right to equali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lso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s discriminatory administrative act does not clearly reveal the illegality. This is why the government continues to engage in discriminatory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is also why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s are needed now.

토론 2. 코로나 상황속의 이주민 차별과 인권침해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센터 동행>에서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원옥금대표입니다.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명령 즉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받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는 행정명령에 대해 이주민 당사자로서, 또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으로서 느끼는 차별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위해 온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국적을 가려서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입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권고로 변경하였지만 경기도는 그대로 시행하였고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자에 포함된 소위 선진국들의 한국주재 대사관의 항의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씩씩하기만 합니다. 만약 검사대상 외국인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한 국가들의 근로자라면 서구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이 항의했을지 생각하면 그들의 이번 서울시에 대한 항의도 위선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항의가 없었더라면 서울시가 명령을 실행한지 이틀만에 권고로 바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상자인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검사 대상자로 오해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야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의 경우는 대상자인지 몰라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중에도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상자인지 몰라 검사를 받지 못한 이들이 행여 감염되면 벌금과 자비 치료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검사하다보니 검사장에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고 그 곳에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산의 경우 새벽 4시에 와서 줄서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 다투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검사하다 감염될까봐 염려되어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들이 이들의 고용을 노출시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검사받으러 가라고 하지 않아 방역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명령의 문제점은 외국인, 특히 노동자들을 잠재적인 감염원으로 간주하는 차별적인 조치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이런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이없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어떤 복지관에서 외국인 많이 방문하니 거기 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손님에게 조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은 더 큰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 센터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본국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한 달 반 후에 다시 한국에 입국했더니 인천공항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었고 공항 면세 구역에서 22일 간 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해서 다행히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휴가를 간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부당해고를 당해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작년 7월에 전북에서 용접 공장에서 근무하던 이주노동자는 일한지 1년이 되어 용접의 독한 연기 때문에 만성 비염 증상이 더 악화되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2개월 간 무급 휴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간 일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다시 일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각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사업주는 노동자를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고 경찰과 119 구급차를 불러오며 위협했습니다. 체온계로 노동자 체온을 재는 척하고 보여 주지 않고 37.5라고 했습니다. 그 후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라고 하고 가지 않으면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노동자 체온도 잴 때도 이주노동자에게 몇 도인지 보여주지 않고 모든 소통은 사업주와 이루어지고 연락처도 사업주의 연락처로 적었습니다. 검사 후, 회사로 왔더니 창고 같은 방에 노동자를 가두고 문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그 방은 모기가 많고 비가 새는 방이고 화장실이 없고 잠자는 곳도 없었습니다. 노동자는 의자 세 개를 붙여서 침대를 만들어 잠을 자보려고 노력해도 모기 때문에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그 방에서 나오려면 각서에 서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4일간 계속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금된 노동자는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자서 지쳐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다음 날 저녁 6시 경에 각서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와 기숙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고등어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는 매일 동물 피를 접하는 가공 업무에 신앙 문제로 인한 괴로움, 저임금, 무거운 상자 운반작업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문제로 사업장변경을 수시로 요청했고 마침내 사업주가 동의해주었습니다. 너무 기뻐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활동을 신청해 구직 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로 구직 활동하러 가는 길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사업주가 생각을 바꿔 사업장변경 동의를 취소했으니 다시 안동에 있는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쁘다 말고 너무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 왔더니 광주광역시까지 갔다 왔으니 기숙사에서 자가 격리 14일간 해야 한다는 회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회사의 여름휴가로 한국 직원도 광주광역시로 여름휴가를 보냈지만 한국 직원은 자가 격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제일 타격을 받는 업종은 주로 식당, 여행사 등 서비스업인데 그로

인해 해고당하면서 임금 체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면세점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7개월 이상 무급휴가를 강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면세점은 140명의 외국인 판매원이 있는데 정부유지지원금을 받도록 해주지 않고 무급휴가를 강요하면서도 사업변경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많은 사례 중 일부일 뿐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바깥출입을 제한 당해 쉬는 날에도 기숙사에 머물러야 하고 친구의 방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은 아무 제한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무 검사대상에서 한국인 직원은 제외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모두들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에 국가도 어렵고 국민도 모두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주민도 한국사회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주민을 배제와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차별적인 정책보다 실제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Discussion 2.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era of COVID-19

Ok-geum Won (Accompaniment, a center for immigrants)

This is Ok-geum Won, a director of <Accompaniment, a center for immigrants> who is in charge of counseling for migrant workers.

In response to an administrative order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employers that business with more than at least one foreign employ must proceed with a COVID-19 test to avoid to be fined, I would like to address the problem that this order is about to create from the standpoint of migrant worker counselor.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immigrants feel discriminated living in Korea. I understand that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are working together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while COVID-19 is not contagious among people with certain nationalities, issuing an executive order that enforces test only on foreign workers is a clear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Fortunatel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hanged the execution level from order to recommendation, but Gyeonggi-do has implemented it as an order, and other local governments such as Daegu are still implementing such orders against foreigners.

It is also quite bitter that only the protests of embassies of so-called developed countries who were included in the subject of test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execution level of administrative order in Seoul were effective. I wonder if Seoul was going to order a test against those who had to get a work permit system, those from developed countries would have ever protested, which makes it a bit hypocritic, and whethe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ould have changed it to a recommendation after two days of executing the order.

Second, there was a lot of confusion in the process of the execution of the order, as the information was not accurately delivered to foreigners who were subject to test. There were also cases where workers working in other regions asked if they had to go for the test, and some foreign students who worked part-time did not take the test because they did not know that they had to get tested.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inquiries from married/working immigrant women. People who have not been tested because they don't know they were subject to are also afraid of fines and treatment cost in case they get infected in the future. And as a result of examining a large number of people at once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a large number of people gathered at the inspection site, making it impossible to distancing themselves

from society, and there was a situation where there was a concern about infection. In Ansan, there were many people who came in line starting from 4 a.m. and waited all day long, and there were so many people that they quarreled. Some people even gave up the test because they were worried that they would get infected during the test.

Third, in ca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re is a problem in the effectiveness of quarantine because employers do not want to expose their employees, so they do not ask workers to get the test.

Above all, the problem with this executive order is that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hatred against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is increasing due to such discriminatory measures that consider foreigners, especially workers, as potential sources of infection. It is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implement policies that would prevent such discrimination or hate among the public, but rather, local governments play a role in promoting discrimination and hatred right now, which seems to be absurd. For instance, there was a case where a hairdresser at a beauty salon advised a customer to be careful not to go there because there are many foreigners visiting at a welfare center.

The entire country is suffering from COVID-19, but immigrants abroad are experiencing greater discrimination and suffering.

In last April, there was a case of requesting emergency help to our center. A migrant worker working in Busan went on vacation to his home country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When he entered Korea a month and a half later, he was notifi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at the company had terminated his labor contract. For that reason, he could not to enter the country and had to stay in the airport for 22 days. After that, he applied for unfair dismissal relief against the company, which eventually allowed him to continue working in Korea.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of migrant workers who went on vacation to their home countries due to COVID-19, and then not allowed to re-enter Korea by being unfairly dismissed.

In last July, a migrant worker who worked at a welding factory in Jeollabuk-do has been working for a year, and the severe smoke of welding worsened symptoms of chronic rhinitis that lead him to unable to breathe. The worker, suffering from pain, asked his employer to change his workplace, but the employer disagreed and instead punished him with an unpaid leave for two months. And then the employer told him that he had to sign a memorandum of work for three years to resume working. When the worker refused to sign the memorandum, the employer threatened to call the police and an 119 ambulance and tell them that he had an infected the worker. He

pretended to take the worker's temperature with a thermometer and said 37.5 without showing it. After that, the employer told the worker to go to the public health center to get a test, and, if not, he would report it to the police again. When the worker's body temperature was measured at the health center, the degree was not shown to him and all communication was carried out wit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r filled out the contact information with his own number. After the inspection, when the worker came back to the company, he was locked up in a warehouse and where a written sign of 'COVID-19 self-isolation room, no outsiders allowed' was posted on the door. The room was full of mosquitos and stuffy, without toilet or a place to sleep. The worker made a bed out of three chairs attached and tried to sleep, but mosquitoes prevented him from sleeping all night. The employer said that the worker would have to sign a memorandum to get out of the room, otherwise he would have to stay there for 14 days. The imprisoned worker was exhausted because he couldn't eat properly or sleep, so he was forced to sign the memorandum around 6 pm the next day. Then he could go to his dormitory.

A migrant female worker who worked at a mackerel processing factory in Andong frequently asked for a change of workplace due to the pain caused by religious conflicts from facing killed animals, low wage, and physical pain caused by heavy box transportation, and finally the employer agreed for the transfer. She was so glad and she went to the job center and applied for a job search and got a job search certificate. On the way to Gwangju on a job search, the job center contacted her, and the employer changed his mind and canceled his consent to change the workplace, so she had to go back to his workplace in Andong. When she came back with disappointment, she was instructed by the company to self-isolate in the dormitory for 14 days since she visited Gwangju Metropolitan City. At the same time, Korean employees also spent summer vacatio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during the vacation time, and they did not self-isolated.

COVID-19 hit the service industries such as restaurants and travel agencies the hardest,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foreign workers don't get paid properly after being fired. In particular, immigrant women working at duty-free shops in Mapo-gu, Seoul are sometimes forced to leave unpaid leave for more than 7 months. This duty-free shop has 140 foreign salesmen, and it did not allow them to receive government maintenance subsidies, forced unpaid leave, but did not allow them to change the workplace.

The examples above are just a few of the many. Most foreign workers living in the dormitory are restricted from going out, so they must stay in the dormitory even on off days and are not allowed to visit their friends. However, Korean employees

working in the same workplace don't have any restrictions. I wonder why Korean employees are excluded from mandatory inspection.

Everyone is having a difficult time. The global pandemic is difficult for the country and for all the people. Everyone must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Migrants are also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However, we still see migrants with the perspective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crisis together this way. I ask health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to execute policies that would be an actual help rather than simply discriminatory.

토론 3. 경기(동두천) 지역 대응 경험

강슬기 (의정부EXODUS)

자택서 숨진 나이지리아 외국인 사후 검사서 '확진'

A 김병호 | © 입력 2021.02.25 20:28 | 댓글 0

자신의 집에서 숨진 40대 나이지리아 노동자가 사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 동두천시 코로나19 현황

1) 동두천시 이주민 확진자 추이

| 날짜 | 검사현황(내국인포함) | 전체확진자 | 외국인확진자 | 비고 |
|---------|-------------|-------|--------|-------------------------------------|
| 2/27(토) | 295 | 20 | 8 | |
| 2/28(일) | 509 | 85 | 81 | 주말 무료검사 마지막(이후 연장) 홍보, 천주교 동행 안내 |
| 3/1(월) | 154 | 20 | 15 | |
| 2(화) | 351 | 7 | 7 | |
| 3(수) | 560 | 14 | 11 | 동두천시 행정명령 시행 |
| 4(목) | 639 | 22 | 18 | 산단 임시검사소 운영 |
| 5(금) | 529 | 17 | 14 | |
| 6(토) | 251 | 6 | 5 | |
| 7(일) | 274 | 8 | 3 | |
| 8(월) | 373 | 7 | 6 | |

2) 동두천시 방역대응

- (학생) 외국인 학생 대상 별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3.3~), 보건소
 - 선제조치 : 유초중고.교 온라인수업, (3.2~3.5)까지
- (선제검사) 현장 기동 임시검사소 운영(3.4) : 1개소(피혁, 염색 산단)
- (검사소 확대) 보산역 앞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운영(3.3~3.14)
 - 기존 도심광장 1개소(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 (경로조치) 소속 사업장 등 역학조사 및 이동경로 방역 조치
- 민관협력 방역대책 간담회
 - 1차(3.3) : 동두천시청, 동두천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양주출입국, 법무부, 종교계 (개신교, 천주교)
 - * 법무부 : 방역이 우선. 단속, 추방 없음.
 - * 동두천시 : 검사소 운영확대. 신속한 긴급물품 전달(체온계 포함)
 - * 질병관리청 : 전국 지역별로 보건소, 시청 재난지원부서, 질병관리청, 이주민센터 그리고 이주민공동체들의 연락체계 구축을 제안

* 천주교 제안 : 미등록 검사가능안내(공문), 공단 협조(근무시간 내 검사), 미등록합법화, 생활지원제도 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

>> 동두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3.3~3.10)

- 2차(3.10) : 동두천시청, 동두천보건소, 종교계(개신교, 천주교)

* 동두천시 : 검사 독려, 역학조사 협조 요청

3) 코로나 감염경로

* 2020년 동두천시 이주민 확진자 : 8명(12월 물류센터)

- 고용허가제 노동자 아닌 주로 미등록이주민, 난민신청자

- 공단 내 집단감염보다는 지역사회 내 감염

- 양주, 포천 산업단지 / 인천, 평택 물류센터 : 동두천시 유입

- 동두천시 어린이집 : 교사 최초확진(양주 확진자 밀접접촉자), 원아 중 7-8명 난민아동

4) 코로나 확산 이유 : 밀집, 밀접, 밀폐

- 기지촌 쪽방

- 경제적인 이유로 공동 거주

- 아프리카 문화 : 공동체 생활, 아이돌봄 품앗이

2. 이주민이 겪은 어려움

(1) 검사전

- 미등록이 검사를 받거나 양성이 나올 경우 구금 후 추방 될 것

- 양성이 나올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확진 이후 절차)

- 격리되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검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음

- 숫자작성 방식의 차이 : 잘못된 결과 통보

(2) 격리 중

- (확진자 급증으로) 자가격리자 긴급식량키트 지급, 확진자 생활치료센터/병원 이송, 방역 지원

- 음성과 양성판정 동시에 받은 가족/동거인 화장실 하나뿐인 비좁은 방에서 격리기간 발생

- 역학조사 : 동선 밝히는 것의 두려움, 조사 언어적 어려움(전화로만 소통)

- 이송될때 안내부족(물품소지 가능여부), 이해 어려움

- 격리 자체에 대한 두려움 > 검사를 받지 않게 됨

- 체류자격 연장 및 법원보정명령(정해진 기한)

(3) 격리 해제 이후

- 퇴원 시 입을 옷 배송, 이동방법

- 격리자 생활지원제도 외국인은 가구수 상관없이 1인가구 기준 지급(미등록이주민도 신청가능)

- 중요 서류 분실(소각)

- 어린이집 등원 거절 : 한국인 어머니들의 반대

-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문의
- 공항에서 '음성' 진단서 요구
- 격리 트라우마

3. 이주민 방역대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이주민센터의 역할

- 이주민센터도 처음이었던 대응 경험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불안감 해소)
- 긴급키트 및 물품 배송

○ 정부당국 반성, 상호신뢰의 문제

- 방역대책에서 배제되어온 이주민(홍보, 마스크구매, 재난지원금 지급)
- 코로나 시작 때부터 문제제기 되어왔던 정보 제공(통번역 문제)
- 그동안의 이주민 정책 >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 결여

○ 행정명령

- 행정명령이 검사의 기회가 된 이주민도 존재
- 이주민 서로 간 설득의 기회(차별을 인지)
- 검사 위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증이 없음을 알고 해고(취직 당시 유효했던 신분증)
- 막상 어떤 사업장은 구분하지 않았음. 내국인도 전부 검사 받게 함. >> 따라서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라고 느끼지 않은 이주노동자도 존재
- 인력부족 문제 >> 검사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
- 행정명령 이전 이후 상관없이 이주민이 느끼는 두려움(변함이 없음)

○ 다양한 관점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 공간적, 사회적 약자 위치가 이주민으로 대체
- 검사 접근 >> 이주민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을 이해
- 주거/노동환경 개선 >> 공간의 위계를 이해
- 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 이주민 정책이슈 개발 필요

○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

- 타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 확진에 대한 비난 받을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 확진자가 치료/관리 대상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 앞으로 쌓아가야 할 것 : 상호신뢰, 연대

Discussion 3. Experience of regional response in Gyeonggi (Dongducheon)

Kang Seulgi (Uijeongbu EXODUS)



1. Current Status of Corona 19 in Dongducheon City

1) Trends of the infected immigrants in Dongducheon City

| Date | Inspection Status (including Koreans) | Covid-19 cases in total | Covid-19 cases in Foreigner | Notes |
|-----------|---------------------------------------|-------------------------|-----------------------------|---------------------------------------------------------------------------------------------------|
| 2/27(Sat) | 295 | 20 | 8 | |
| 2/28(Sun) | 509 | 85 | 81 | Free inspections on weekends, last day (extended later) PR, guidance on catholic accompaniment |
| 3/1(Mon) | 154 | 20 | 15 | |
| 2(Tue) | 351 | 7 | 7 | |
| 3(Wed) | 560 | 14 | 11 | Dongducheon Executive Order Implementation. |
| 4(Thu) | 639 | 22 | 18 | Industrial complex, Temporary Survey center operation |
| 5(Fri) | 529 | 17 | 14 | |
| 6(Sat) | 251 | 6 | 5 | |
| 7(Sun) | 274 | 8 | 3 | |
| 8(Mon) | 373 | 7 | 6 | |

* Most of them are asymptomatic, including children.

2) Preventive response to Dongducheon City

○ (Student) Operation of a temporary designated site for testing coronavirus for foreign students (3.3~), health center.

– Preemptive measures: Online classes for Preschool, Elementary, and middle & high schools, up to 3.2.~3.5.

○ (Pre-inspection) Operation of the on-site mobile temporary testing center (3.4.): 1 location (leather & dyeing industrial complex)

○ (Expanding of Center) Additional operation of a temporary designated site for

testing coronavirus in front of Bosan Station (3.3.~3.14.)

– 1 center existing downtown plaza (until the end of the 2nd stage of social distancing)

○ (Acts of a moving path)Epidemiological survey and measures to prevent the moving routes, such as a place of business concerned, etc.

○ Private–public mix prevention of epidemics meeting

– 1st (3.3): Dongducheon City Hall, Dongducheon Health Center,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angju Immigration, Ministry of Justice, religious circles (Protest, Catholic)

* Justice Department: Prevention first. No crackdown, no deportation.

* Dongducheon: Expanding the operation of the inspection station. Rapid delivery of emergency goods (including thermometers)

* CDC: It proposes to establish a contact system for public health centers, city hall disaster support departments, disease management agencies, migrant centers, and migrant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 Catholic Proposals: Unregistered Inspection Guide (official letter), Cooperation of the Corporation (inspection within working hours), Legalization of Unregistered, Improvement of Standards for Payment of Living Support System

>> Enforcement of Executive Order for Corona Diagnostic Inspection of Foreign Workers in Dongducheon (3.3~3.10)

– Second (3.10): Dongducheon City Hall, Dongducheon Public Health Center, Religious (Protest, Catholic)

* Dongducheon: Incentives to Test, Requests for Epidemiological Cooperation

3) Corona infection path

* 2020 Dongducheon Migrants Confirmed Case: 8 people (December, Logistics Center)

– Not employment permit workers, but mainly unregistered immigrants and refugee applicants

– Infection in the community rather than mass infec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

– Yangju, Pocheon Industrial Complex / Incheon, Pyeongtaek Logistics Center: Inflow to Dongducheon

– Dongducheon Nursery School: First confirmed teachers (close contact with confirmed residents in Yangju), 7–8 refugee children among original children.

4) Reasons for Corona Diffusion: Concentration, Closeness, and Being Sealed

– A tiny house at Military camp town.

– Cohabitation for economic reasons

– African culture: Community life, child care (exchange of labor)

2.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migrants;

(1) Before inspection

- If unregistered migrants are examined or positive, they are deported after detention.
- If positive, is there a possibility of getting proper treatment (procedure after confirmation)?
- How will they maintain their livelihood if isolated?
- No time to go for a test
- Differences in how numbers are written: Notification of incorrect results

(2) Under quarantine

- (With a surge in confirmed populations) to provide emergency food kits to People in Self quarantine, Life Therapy Center/Hospital Transfer to Confirmed Case, Delays in Prevention.
- Families/ housemates who receive both negative and positive results should be quarantined in a cramped room with only one bathroom
-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Fear of identifying path of movements, difficulties in language (communication by phone only)
 - Lack of information when transported (whether goods can be owned) and difficult to understand
 - Fear of quarantine itself > not being tested
- Extended stay qualification and correction order of court (set deadline)

(3) After the release of isolation

- Delivery and transportation of clothes to be worn when discharged
- Under the quarantine living support system, foreigners are paid only on a single-person basi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family (unregistered migrants can also apply)
- Loss of important documents (incineration)
- Refusing to attend daycare centers: Opposition from Korean mothers
- Inquiries about issuing a confirmation of the release of quarantine
- 'Negative' certificate required at airport
- Quarantine trauma

3. How should the quarantine measures be changed?

○ Role of the immigration center

- It was the first time for the immigration center to respond like this.
- Provide accurate and prompt information (relieving anxiety)

- Delivery of emergency kits and supplies

- Government authorities' reflection and mutual trust issues

- Immigrants who have been excluded from the quarantine measures (public relations, mask purchase, disaster support payment)
- Information that has been raised since the beginning of Corona (translation problem)
- Migration policy > Lack of trust in government authorities

- Administrative order

- Rather, there are immigrants who have an opportunity for administrative orders to be examined.
- Opportunity to persuade immigrants one another (recognition of discrimination)
- Firing after knowing that there was no ID card through identification for inspection (identification card valid at the time of employment)
- Some businesses have not been distinguished. Allow all Koreans to be tested. Therefore, there are migrant workers who do not feel that the Administrative order is discriminatory.
- Lack of manpower >> The concentration of people at the laboratory all at the same time
- Fear of migrants regardless of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ve order (not changed)

- Integrative approach is needed from various perspectives

- The location of the spatial and social weak is replaced by migrants
- Test Approach >> Understanding the various classes in the migrants
- Improving Housing/Labor Environment >> Understanding the hierarchy of space
- Development of migrant policy issues in response to Corona 19 by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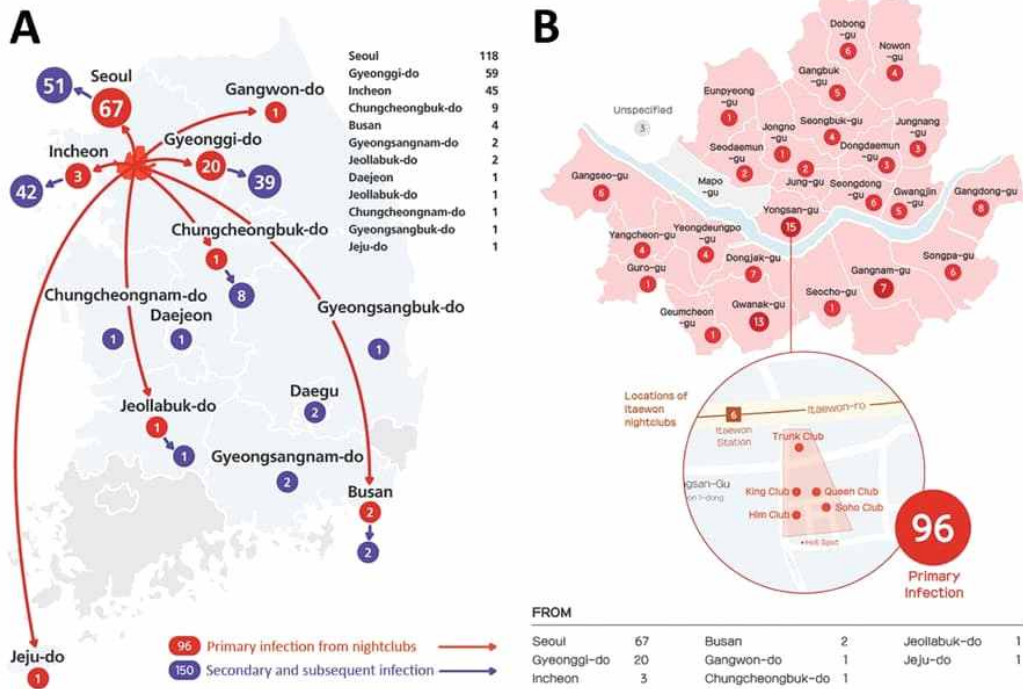
- The problem is not human, but corona

- To prevent the distaste for others from spreading
- To escape the anxiety of being accused of confirmation
- The confirmation person escapes from the location of the treatment / managed object
- What to build up in the future: mutual trust, solidarity

토론 4. 2020년 5월 이태원 집단감염 대응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활동 중심으로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前))



2020년 5월, 대한민국 주요 도시와 지방에서 진단된
서울 이태원 나이트 클럽 발 COVID-19 사례.

1.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의 주요 활동

- 0) 긴급 대응 구성
- 1) 상담활동
- 2) 언론 대응
- 3) 방역본·지자체 대응
- 4) 커뮤니티 대상 홍보
- 5) 서울외 지역 단체와의 소통

* 성소수자 커뮤니티와의 연결

2.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방역당국 대응 내용

- 1)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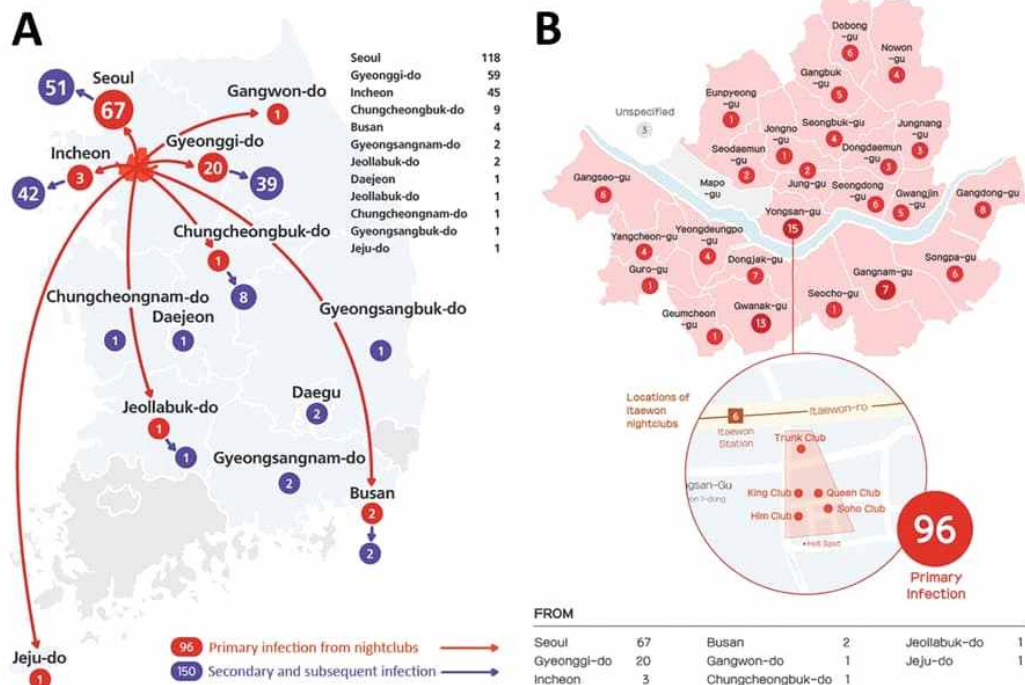
- 2) 서울시
- 3) 경기도
- 4) 인천시
- 5) 국가인권위원회

3.대책본부의 활동평가

- 1) 빠르게 대응을 시작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활동
- 2) 공동체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는 메시지, 커뮤니티에 전달된 마음
- 3) 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정부와 소통이 가능했던 시기
- 4) 언론, 미디어의 혐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혐오를 예방
- 5) 더 많은 소통과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
 - 성소수자 이권, 성소수자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성소수자이면서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고 대응이 필요했으나 충분히 하지 못함.
 - 인권운동의 언어와 몸짓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대중들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끊임없는 고민 필요

Discussion 4. Response to Itaewon mass Infection in May 2020;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Emergenc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Sexual Minority 19

Lee, Jong Geol (Opposition to sexual minority discrimination Rainbowaction/
 Headquarters of Queer Action Against COVID-19(Ex))



In May 2020, COVID-19 occurred at the Itaewon nightclub in Seoul, which was diagnosed in major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1. Major activities of the Corona 19 Emergenc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Sex Minorities;

- 0) Configuration of emergency response;
- 1) Counseling activities
- 2) Press response
- 3) Responses to the copy of the anti-virus and local governments;
- 4) Public relations activities for community members
- 5) Communication with organizations outside Seoul;

* Connection with community for sexual minorities

2. Details of response to the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emergenc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of Corona 19 sex minorities;

- 1) KDCA,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3) Gyeonggi-do
- 4) Incheon city
- 5)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3. Assessment of activity by th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1) Activities of the sexual minority human rights movement that started responding quickly.
- 2) A messag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community together and a heart delivered to the community
- 3) When it was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the government as a sexual minority and as a sexual minority citizen
- 4) Defending them from the hatred of the press and media and preventing hate.
- 5) More communication and activities are needed
 - It wa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spond to various identities of sexual minorities, including sexual minority migrants, sexual minority workers, and sexual minorities with disabilities, but in reality, it was not enough.
 - It is important to constantly think about how the language and gestures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can get closer to the sexual minority community and the public.

토론 5. 코로나19 상황 외국인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입장

김병철 (법무부 이민조사과)

*서면 자료 없음. 필요 부분 속기록 붙임

문제의식을 한번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6월까지 캐나다에 거주를 하다가 7월 1일에 귀국을 했는데 캐나다로 연수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던 이유가 왜 2010년대 들어서 이주민에 대해서 굉장히 적폐적인 방향으로 서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캐나다만 아직도 이민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남아 있을까라는 것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2년 잘 지냈는데 지난 3월에 갑자기 코로나가 번지면서 락다운되더니 거기에 있는 한국 식당들의 유리창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면 줄을 서서 가는데 한국 사람을 보면 할머니들이 오 마이갓! 그래요. 들으라고.

그리고 더러 혹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있거나 하면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거를 보니까 뭘까? 혐오나 차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 사회에는 어디나 존재하는 것 아니냐, 캐나다는 사회가 다문화주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런 말로 본성을 감추고 있었을 뿐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원래 우리 사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주민과 어울려 사는 그런 관행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실제 어떤 감정을 갖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번 사건이 그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명색이 이민정책총괄부처임에도, 그리고 매일 아침 차관님, 장관님을 따라 배석해서 중대본 회의를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논의를 잘해서 걸러지지 못하게 한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만 하자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2월 15일에 남양주 대동플라스틱공장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100명이 넘는 외국인노동자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검사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와중에 3월 1일 동두천에서 하루에 88명이 한꺼번에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동두천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동두천이 거기가 외국인노동자들의 타운이었던 겁니다. 거기는 보통 잠을 자거나 놀러 오는 겁니다. 일은 지방에 흩어져서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설 연휴 동안 결국 동두천에 몰렸던 것 같다. 그래서 밖에서 감염됐을 수 있는데 동두천에 모여서 집단 감염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나온 게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를 추진을 하는데 정부당국이나 지자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 5월부터 15개국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계속 뿌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모일 만한 곳, 휴대폰, 사업장, 식당 이런 곳에 가서 다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전수조사 명령이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대부분 지방에서 자꾸 그런 압박이 생기다 보니 개발해낸 것이 제

일 먼저 그전에 다른 지역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동두천시가 먼저 발동하고 동두천 모델에 따라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따라서 했었던 거죠. 경기도까지는 크게 이슈가 안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내니까 서울시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대사관이라든가, 서울시가 아무래도 화이트컬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목소리를 내다 보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저반의 사정이 있었던 것,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급한 마음에 내다 보니 그런 게 나왔었던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검사가 유일한 방역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이 방역에 성공한, 성공이라고 평가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검사였습니다. 본격적인 검사, 선제적인 검사, 빠르게 사람들을 찾아내고 빠르게 이 사람들을 격리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었던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 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사건을 겪었고 2015년 메르스 사건을 겪었는데 그때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 제일 중요한 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과하다 싶어도, 실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초기에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그 당시에 얻었던 사회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엔 좀 신속하게, 때로는 과하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대본에서 회의하면서 가끔은 저도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라고 저지를 한다는 것이 그 타이밍에서 쉽지 않죠. 그것을 저지하기보다는 빨리 이거라도 해서 빨리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거라도 하자라는 생각을 보통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공식적인 이유 외의 촉매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외국인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면서 안내문을 나눠줬습니다. 이걸 남양주 플라스틱 사건이 생긴 다음에는 캠페인도 만들고 단속하지 않는다는 말도 넣고 강하게 해서 안내문 21개국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사업장에도 직접 찾아가서 전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이신 분들, 외국인 커뮤니티와 직접 맞닿아 계신 분들,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검사를 받으러 선제적으로 나오도록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단속하는 데 그런 정보 이용하지 않는다. 안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scussion 5. Position COVID-19 Foreigner Policy

Kim Byung-cheol (Ministry of Justice /
Immigration Policy Division)

*No written data. Necessary stenographic records attached

I came to share the already proposed problem once more.

I lived in Canada until June of last year and returned to Korea on July 1st. I prepared to go to Canada for training because most Western societies were moving in a very negative direction for migrants in the 2010s except for Canada. I wanted to study whether there is still a culture of generosity towards immigration. So, I went and I had a good time for two years, but in March, the pandemic suddenly broke out and there was a locked down. Then all the windows of the Korean restaurants there were broken. We would usually stand in line to go to the market. When an elderly woman saw a Korean person they would remark by saying, "Oh my god!" It was for them to hear.

There were some people who threw stones at young students. Witnessing that, what can I say? In a way, hate or discrimination exists everywhere in any human society, Canada is perceived as a country of multiculturalism and immigration, but maybe these words simply concealed the society's true character and it surfaced during this crisis.

Our society, as everyone knows, is a country that does not have the customs, traditions, or cultures of living with migrants.

So, we don't know what migrants are thinking and what they are actually feeling. I think this is one of those typical cases. Despite the fact that I am working as the head at the Immigration Policy Division, attending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CDMH) meetings accompanying the Vice Minister and the Minister every morning, I apologize for not being able to screen out these things during the meetings.

This can be an excuse, but here was a case on February 15th after the Lunar New Year holiday where more than 100 foreign workers were suddenly confirmed at a place called Daedong Plastic Factory in Namyangju. Everyone, everyone gathered at the CDMH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was shocked. So we thought we needed to quickly roll out with testing. Then on March 1, 88 people in

Dongducheon were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COVID-19.

The problem with Dongducheon is that it is a town of foreign workers. They usually come to sleep or party. Their workplaces were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It seems that they flocked to Dongducheon for the Lunar New Year holidays. They may have been infected from elsewhere, but it seems that there was a cluster infection by gathering in Dongducheon. Alarmed by the situation we called for a total inspection.

It's been noted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did not provide proper information for total inspection, but we have translated and distributed brochures into 15 languages since May of last year. We went to deliver these brochures to as many areas where many foreigners congregate, especially to places where many foreigners gather: workplaces, and restaurants and even sent text messages. We have requested them to come for testing, but I don't think the message was delivered properly, so a total inspection was mandated.

I didn't come up with it, but because different provinces are constantly pressured, and there were other areas prior to that, and the City of Dongducheon enforced it first. Then Gyeonggi-do and Seoul followed their model. It wasn't considered a big issue in Gyeonggi-do until it was mand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re are more embassies of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more white-collar workers in Seoul, and thus there were more opposing voices against the mandate. That was when we realized that this wa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I am not trying to make excuses for the situation. I am not saying that we did a good job. No, that's not it at all. But I would like you to understand the mandate was carried out in a hurry.

Now I know that testing is not the sole answer to quarantine. I admit it, but Korea was recognized internationally to have successfully or successful quarantin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behind it was testing. I think regular testing, proactive testing, and trying to find as many infected people and isolating them quickly as possible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infection was most crucial. In a way, at that time, that process may have been the only way we knew how.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we learned from the H1N1 influenza in 2009 and MERS in 2015 wa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t its initial stage promptly as possible, even if the process seemed excessive and left room for error. That was a lesson learned from that time. So this time, we took measures a little quicker and even more excessively.

I sometimes hear of stories that are startling during our meetings at the CDMH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it's not easy to pinpoint to a problem at that time because we're more concerned about stopping the spread of the infection in any way we can. So please understand how we have been working.

In addition, the last thing I would like to ask aside from the official reason for my coming here is to act as a catalyst. As I mentioned before, we have visited foreign communities and handed out information brochures. After the Namyangju plastic factory incident, we have made a campaign and have included that there will be no crackdowns, and translated information brochures in 21 languages. These brochures have been directly delivered to the workplaces, but I am a little doubtful of whether they have been delivered properly.

So, to those who are gathered here, those who are in direct contact with the foreign communities, and to everyone around you, please let them know so that they can be proactive about getting tested. Please reassure them that we will not use any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esting for crackdowns.

I would like to ask you once again to reassure them. Thank you.

질의응답. Q&A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들이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두가 신경 쓰고 있고요. 이주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단속을 안 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작년 5월에 코로나 검사하러 갔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관리사무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부가 단속을 안 한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이주노동자 합법화 해줘야지 전체 노동자들이 나와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안에 고립되고 있고 또 정부가 행정명령까지 내려가면서까지 이주노동자를 코로나 전파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첫째는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시켜주십시오. 중대본에서도 매일 회의한다고 하시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선별진료소에 500명인데 검사할 수 있는 노동력이 2000명이 몰렸습니다. 이거는 사업자들이 일요일밖에 검사할 시간을 안 주고 자발적으로 해도 사업자들이 일만 시킵니다. 그리고 가서 검사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숙소도 이렇게 환경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들이 마련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낙인찍히지 않게 코로나 전파자로 낙인찍히지 않게 모든 사회에 전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홍조 : 저는 합법화보다 더 좋은 방역정책이 지금 이 순간 있을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아까 동두천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법무부를 포함해서 방역당국, 정부와 지자체 힘만으로 못했죠.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들,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인권 사회, 시민사회 단체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형태의 거버넌스를 이번 사안 때문에 부득이 만들어도 좋은 것이고 그를 통해서 향후에도 계속 그런 채널들을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장에 대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 맞는 친화적이 감수성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하는 것이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통보의무 면제를 5월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생긴게 언제입니까? 출입국관리법을 제가 왜 알고 있겠습니까. 저는 보건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출입국관리법을 유일하게 아는 법 조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신고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주민들이 그 법이 있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온 10년동안 뭐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5월부터 열심히 홍보를 하시고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문자로 하는 것도 그렇구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인권위에서 1000명 정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단속 홍보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80%가 넘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성하셔야죠. 이제서야 활동을 하시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니었다는 것, 그 고민과 하나 더붙어서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보의무 면제가 아니라 금지를 해야 한다. 저는 이거는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대표) : 먼저 법무부에 대해서 제가 유감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에 가장 바빴던 정부부처를 들라면 방역당국 외에 법무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초기부터 외국인 단기치료자 신고자들 여러 외국인 통제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왔습니다. 정책들을 보면 외국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봤지 이분들을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등이 외국인 부족으로 철저히 수단으로 쓰는 측면이 있거든요. 반면에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이주노동자들 단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의 교육권에 대한 접근 문제도 있었고요. 게다가 법무부가 선순환 외국인 정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홍보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재입국 무산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감스러운 면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희생자로 삼은 표본이었습니다. 코로나19 경기도가 작년에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가 행정명령,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권고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선도했던 행정명령 중에 타지자체들이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인권침해적인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장이 취한 인권침해적 행동이 사회적 규제 로 설정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이주노동자로 특정한 것은 철저히 국가주의, 혈통주의에 기반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직위와가 합법과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소수자를 차별하는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국가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철 : 기본적인 접근의 시작점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이주노동자, 제가 말하는 불법체류인이 불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분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여기에 체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법화 문제는 건의로는 많이 들어오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형성 문제, 중요하죠. 저희도 출입국 관련 지원하시는 분들과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참석을 안 하고 있나 보네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만 참석을 하실 건지요.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까지 뭘 했느냐, 왜 알리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하지만 법령이라는 게 만들고 나서 그 법령을 말 알리러 다니는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보통 그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사항을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전달을 하고 그런 정도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죠. 규정 자체로 현재는 면제가 아니라 금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지만 어쨌든 현재는 금지가 아니고 면제입니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저희 기본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옥금 : 미등록이주민 상담 전화가 매일 옵니다. 운전 중에 단속당해서 경찰이 신분을 묻고 운전면허증 달라고 하고 그럴때는 미등록인 것이 발견되어 잡혀가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외국인보호소에 미등록이주민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국에 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

요. 6개월 이상 그런 상황도 있구요. 출입국사무소는 단속 하지 않는다고 계속 하는데 사실상 계속 잡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보호소 안에 밀집하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쭙봤는데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김병철 : 저희가 말씀드린 건 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수집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전달 하지 않는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한국에서 아무 문제없이 살아도 된다 이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은 저희 눈에는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하는 것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운전을 진짜 하다가 단속이 된다는가 그런 경우, 아니면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이 확인 합니다. 그런 것은 일종의 민생 치안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발휘하지 말 아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검사를 하러 가다가 경찰과 만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분간 경찰에게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협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그동안은 특별히 민생에 대한 신고가 오지 않는 한 단속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지금 베트남 난민들 있습니다. 베트남이 작년 12월부터 비행기를 못 띄워서 발생한 건데 3월부터 다시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 13일, 18일, 4월 2일 여기까 지 해서 한 번에 80명 정도씩 현재 출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200명씩 특별기를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송환 노력을 관계 국가 대사관하고 연락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No translation.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